

미얀마 정세변화와 한국-미얀마 경제협력 비전: 한국의 관점

(2026.9.15, 화)

대전대학교 특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 연구위원
송 승 종

발표 순서

1

• 들어가며: 왜 지금 미얀마인가? (Why Myanmar Now?)

2

• 미얀마 정세: 군복을 벗은 군정, 끝나지 않은 전쟁

3

• 희토류가 바꾼 미얀마의 전략적 가치

4

• 한국형 조건부 관여의 설계: 고립-승인을 넘어

5

• 한·미 경제협력 로드맵: 문틈을 열고 선택지 선점

6

•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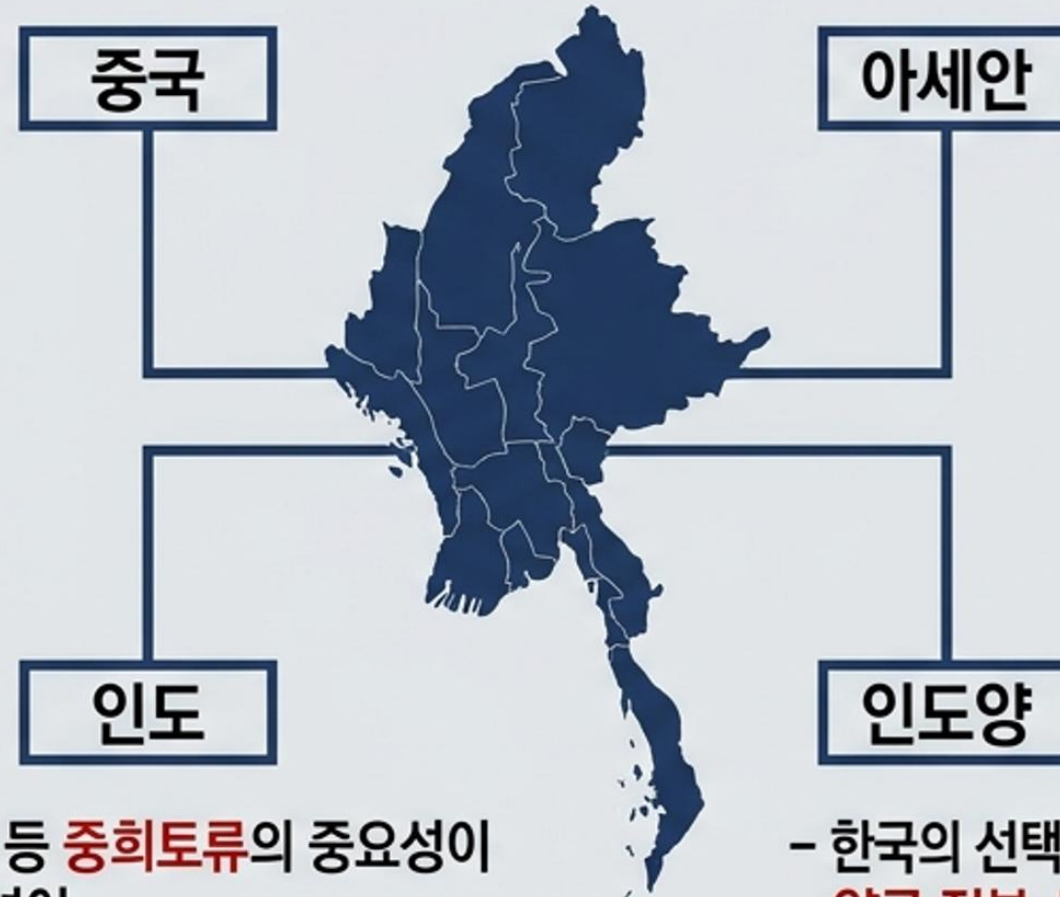
I. 들어가며: 왜 지금 미얀마인가? (Why Myanmar Now?)

■ 왜 지금, 왜 미얀마인가 (Why Myanmar Now)

- 2026년의 미얀마는 제도적 전환, 다원적 대외협력, 중히토류의 부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략적 연결국가

- 전략적 교차점: 미얀마는 중국·인도·아세안을 잇고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을 연결하는 지정학적·경제적 교차점

2026년 새 연방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중국·라오스·태국을 잇는 정상외교가 연이어 전개되며 대외협력의 선택지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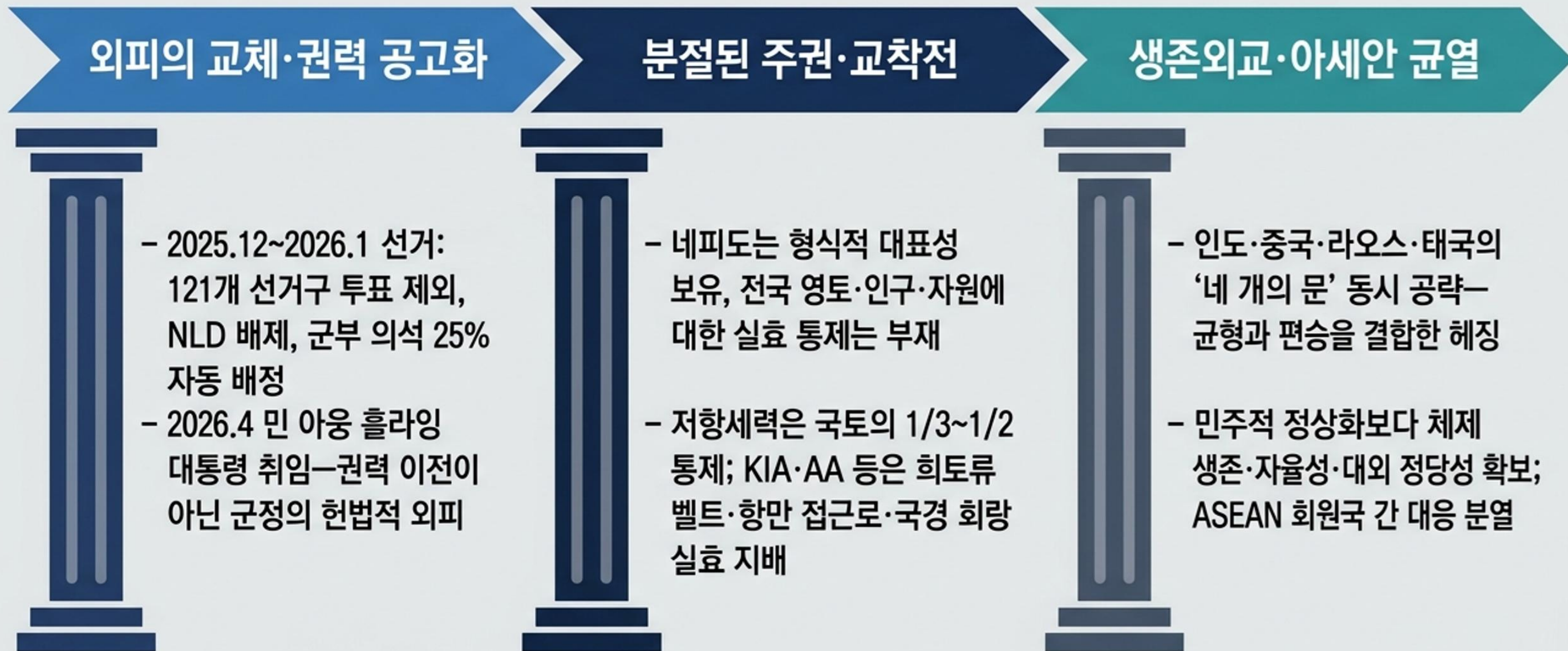


- 동시적 변화: 디스프로슈와 테르븀 등 중히토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얀마는 자원 보유국을 넘어 전기차·로봇·풍력·첨단제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 후보로 부상
한국은 2021년 이후의 정책을 현재 여건에 맞게 점검하고, 민생·기업·기술·인재를 중심으로 단계적 협력의 공간을 넓힐 필요

- 한국의 선택: 오늘 출범하는 연구회는 양국 정부·산업계·학계·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미래 사업을 준비하는 트랙 1.5 지식 플랫폼이 가능

II. 미얀마 정세: 군복을 벗은 군정, 끝나지 않은 전쟁

- 문민화가 아닌 **외피 교체**, 통합 통치가 아닌 **분절된 주권**, 정상화가 아닌 **생존외교**



■ 선거에서 대통령 취임까지의 제도 전환 (Institutional Transition)

● 2025년 말부터 2026년 4월까지의 일정은 비상운영체제에서 헌법상 정부 구조로 이동하는 제도적 전환의 시간표



- 제도적 시간표: 2025.12.28~2026.1.25
총선의 3단계 실시, 지역별 행정·안전
여건에 따른 시행 범위 차이
2026.3.30 민 아웅 흘라잉의
최고사령관직 이양과 대통령 취임을 위한
헌법상 절차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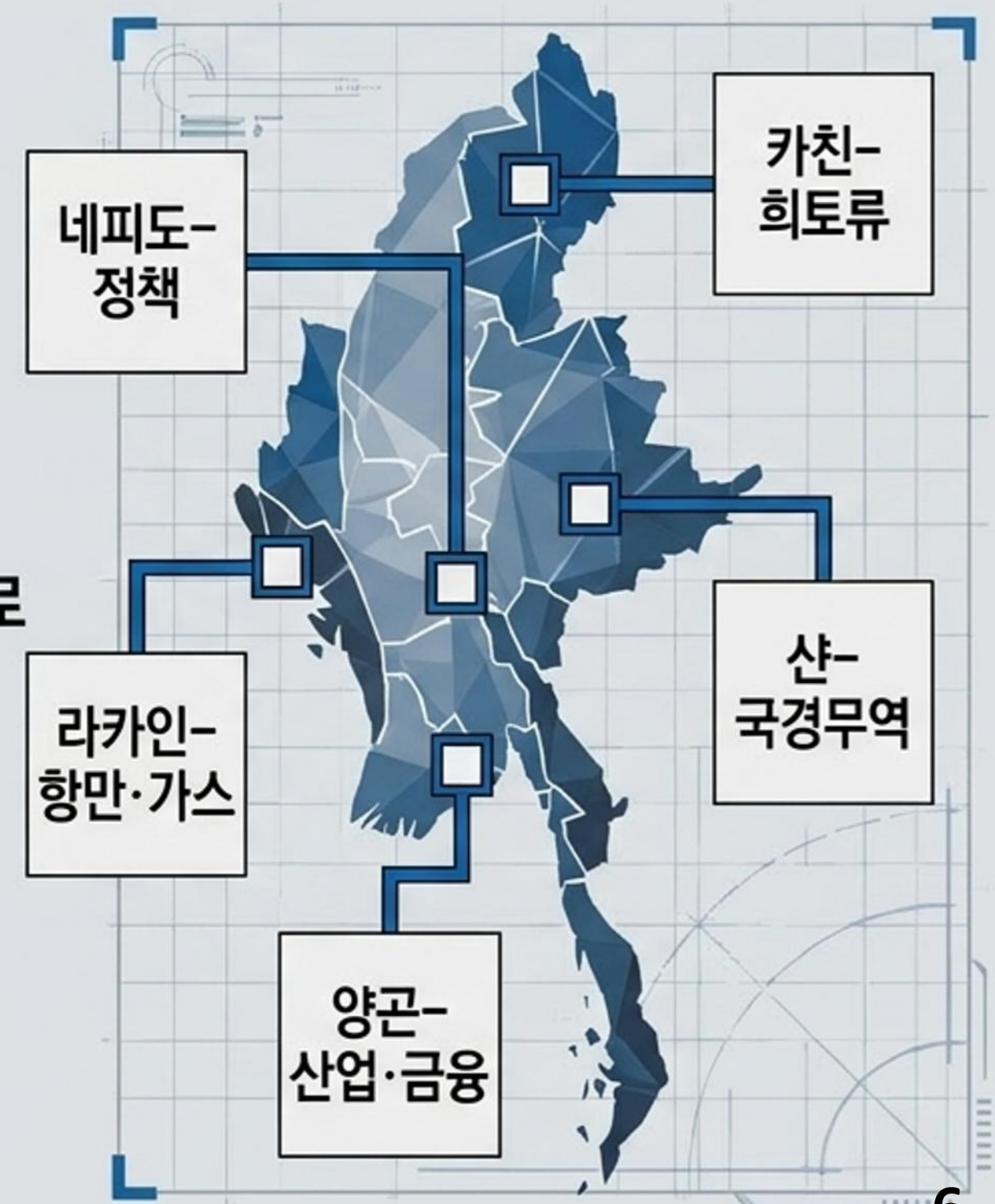
- 사회통합 신호: 2026.4.3
상·하원 선거인단 584표 중 429표로
제11대 대통령 선출, 4.10 새 연방정부
원 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4천여 명 대상
사면·형 감경과 사회통합 초기 신호

- 한국의 관찰점
한국의 관찰 기준: 통관·결제·노동·투자·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제도 운영 변화

■ 다층적 주권과 지역별 협력 여건 (Layered Sovereignty)

● 미얀마에서는 중앙정부의 국가대표 기능과 지역별 행정·경제 운영이 병존하므로 협력도 다층적으로 설계 필요

- 지역별 차이: 중앙정부는 조약·외교·국가제도를 담당하지만, 일부 국경·자원 지역에서는 지역기구가 주민 생활과 이동경로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
카친주의 치푸·팡와는 중희토류, 라카인주의 짜욱푸는 심해항과 에너지 회랑, 산주는 국경무역과 육상물류에서 핵심
- 핵심 경제노드: 지역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중앙 차원의 합의만으로 물류·환경·지역사회 협력의 실행 가능성을 모두 판단에 한계
정부 간 공식 소통, 아세안·국제기구 협력, 대학·연구기관 네트워크, 지역사회 접점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용필요
- 다층 접근: 다층 접근은 특정 주체를 배제하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포용성·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위험관리



■ 네 개의 문과 실용외교의 확장 (Four Diplomatic Doors)

- 2026년 미얀마 외교는 한 국가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파트너와 협력하며 선택지를 확대하는 헤징 전략의 성격을 확인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 인도·중국: 인도 방문(5.30-6.3): 기술·에너지·핵심광물·국경 인프라 협력을 확인하며 서부와 인도양 방향의 연계성을 강화 중국 방문(6.15-6.19): 재난지원·보건·언론·인공지능·디지털경제 등을 포함한 18건의 협정·양해각서를 체결		- 라오스·태국: 라오스 방문(7월): 메콩권 국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역내 연결성 강화의 기반 강화 태국 방문(8.6-8.7): 노동·환경·국경협력과 함께 양자교역 120억 달러 목표를 제시해 실물경제 협력을 전면화	
- 한국의 공간: 아세안 회원국은 각자의 국경·교역·인도적 필요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도 사안별 협력의 공간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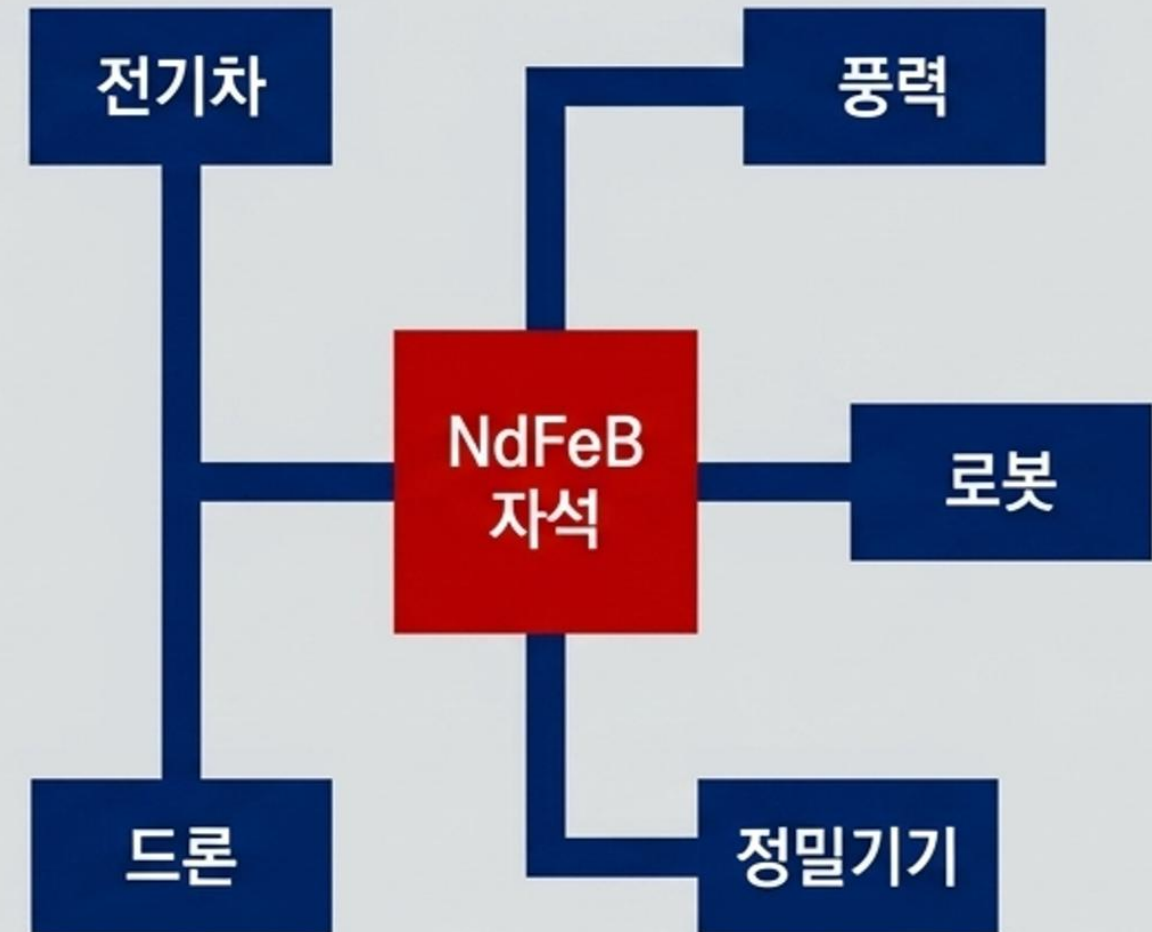
편승이 아닌 다원적 헤징

III. 희토류가 바꾼 미얀마의 전략가치

■ 희토류가 바꾼 미얀마의 전략가치 (Rare-Earth Strategic Va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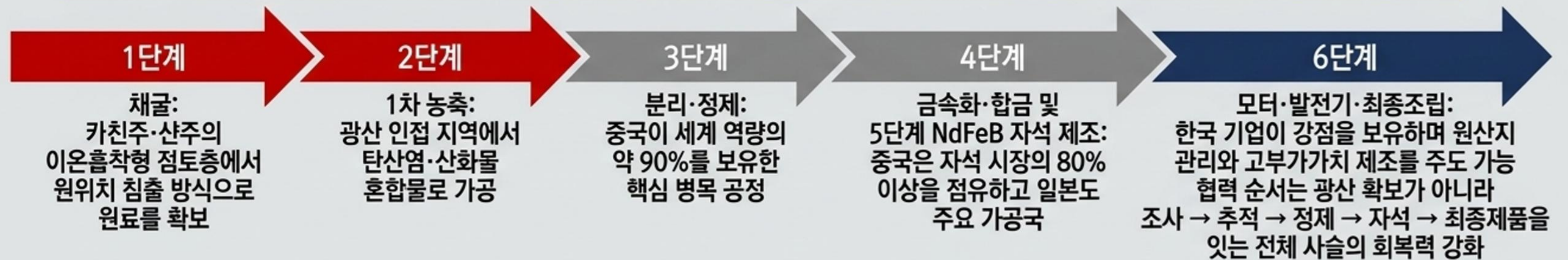
● 중희토류는 미얀마를 자원 보유국에서 한국의 미래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경제안보 파트너 후보로 전환

- 산업적 필수성: 디스프로슘과 테르븀은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내열성과 성능을 높이는 핵심 원소이며 공급원은 매우 제한적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발전기, 산업용 로봇, 드론, 정밀기기 등 한국의 주력·미래산업에 폭넓게 활용
- 미얀마의 위치: 카친주 치푸·팡와의 이온흡착형 점토층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중희토류 공급원이며 중국 정제산업과 긴밀히 연계 한국은 최종제품 제조에서는 경쟁력이 높지만 채굴·농축·분리·정제·합금·자석 등 상류 공정에서 외부 의존도 심화
- 협력 목표: 양국 협력의 목표는 단순 원료 확보가 아니라 데이터·환경·정제·재활용을 포괄하는 신뢰 가능한 공동 가치사슬의 구축 필수



■ 광산에서 영구자석까지의 공급망 6단계 (Six-Stage Supply Chain)

● 공급망을 여섯 단계로 분해하면 한국이 어디에서 취약하고 어디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가 명료화



〈표 1〉 카친주 광산에서 한국 공장까지 — 중희토류 공급망 6단계 해부

단계	공정	주요 위치	통제 주체	한국의 개입 가능성
1	채굴(원위치 침출)	카친주 치퓌·팡와, 산주 만통	카친독립군, 타양민족해방군, 와주연합군	직접 개입 불가. 위성영상 기반 활동 모니터링에 한정
2	1차 농축(탄산염·산화물 혼합물)	광산 인접 현장	중국계 기업과 현지 무장조직의 결합	직접 개입 불가. 무역통계 분석으로 물동량 추정
3	분리·정제	중국 장시·광둥 등	쿼터를 배분받은 중국 국유 2개 그룹	제3국 대체 정제 협력. 호주 등 사업자와의 분리 공정 제휴 추진
4	금속화·합금 제조	중국	중국 기업	국내 설비 투자 보조와 규제 합리화
5	영구자석(NdFeB) 제조	중국(세계 80% 이상), 일본	중국·일본 기업	생산 내재화, 재자원화, 대체·저감 기술
6	모터·발전기·최종 조립	한국	한국 기업	전면 통제가능. 원산지 신고와 실사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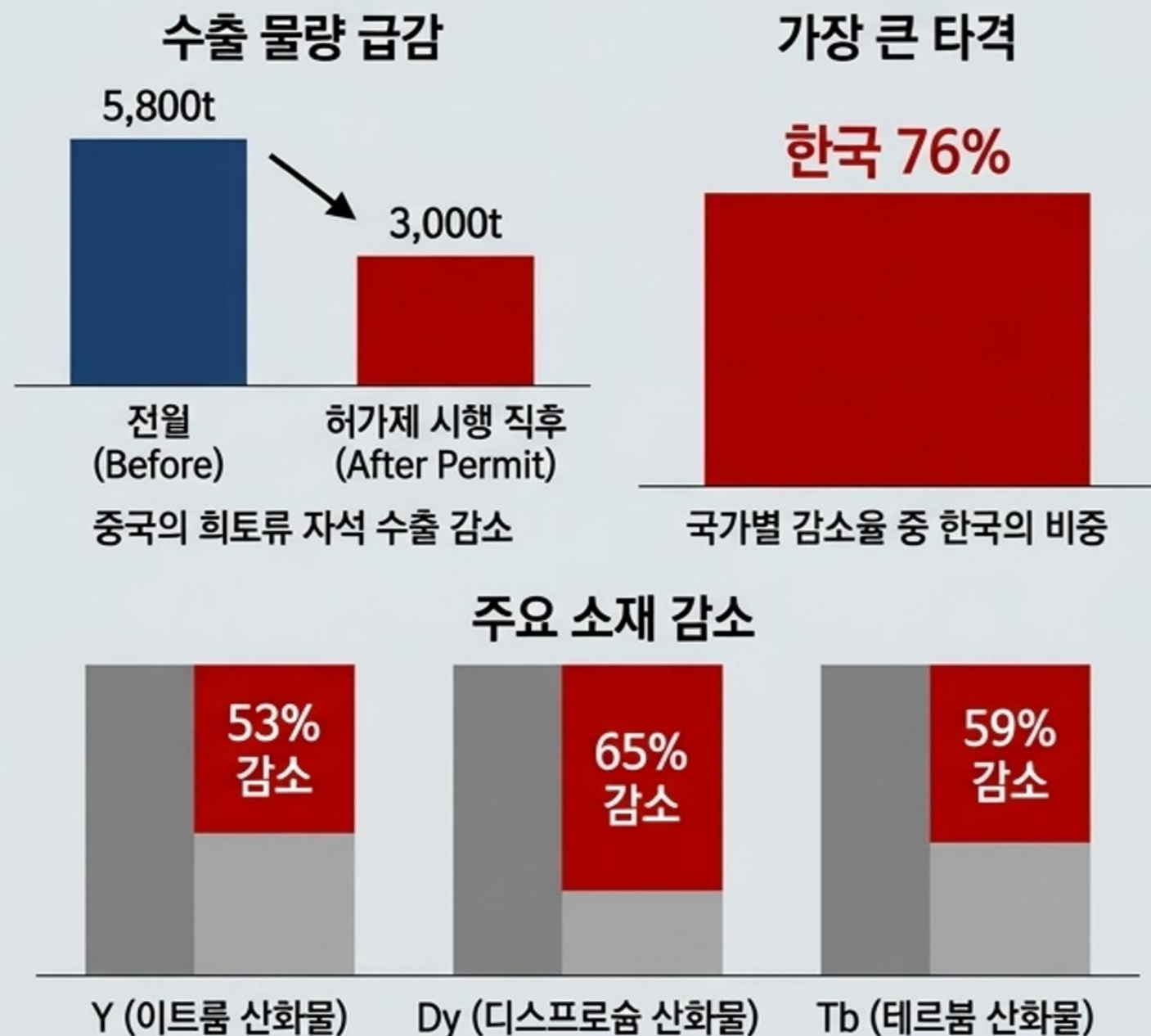
송승중(2026), 제2장 제1절 〈표 1〉.

■ 수출허가제가 드러낸 한국의 최대 노출 (Export-Control Shock)

● 2025년의 수출허가제는 한국 산업이 희토류와 자석 공급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수치로 확인

- 수출 급감: 2025년 4월 중국은 디스프로슘·테르븀을 포함한 희토류 7종과 고성능 자석을 수출허가 대상으로 지정
허가제 시행 직후 중국의 희토류 자석 수출은 전월 약 5,800t에서 약 3,000t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
- 한국의 충격: 국가별 감소율에서 한국은 76%로 가장 큰 영향을 받아 완제품 제조 역량과 상류 소재 의존도의 불균형이 노출 1년 누적 기준으로 이트륨 산화물 53%, 디스프로슘 산화물 65%, 테르븀 산화물 59%가 각각 감소
- 대응 패키지: 한국의 대응은 비축만이 아니라 공급원 다변화, 국내 분리·정제·자석 생산, 재자원화, 저감·대체기술을 함께 추진하는 패키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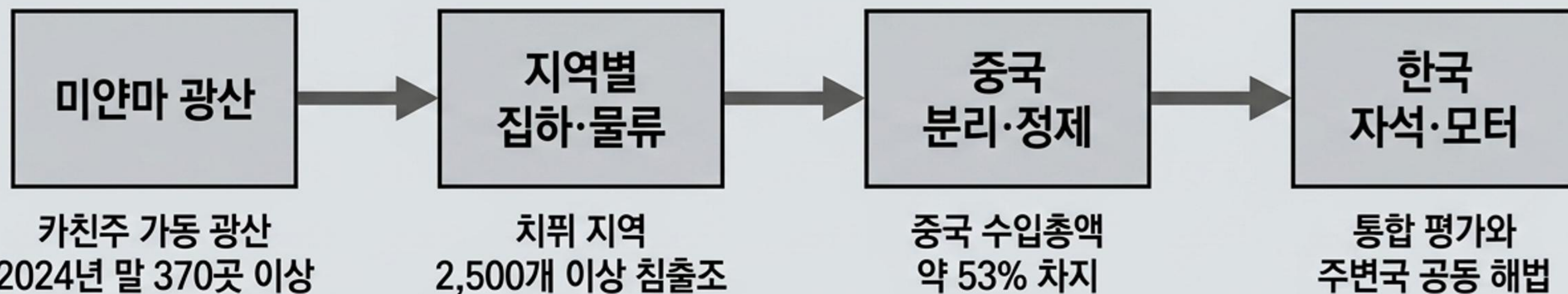
수출허가제 충격 요약 (Export-Control Shock Summary)



■ 미얀마 자원·지역 운영·중국 정제의 연결 (Three-Link Rare-Earth Structure)

● 미얀마 중희토류의 현실적 가치는 광맥의 위치, 지역별 운영 구조, 중국 중심 정제역량을 함께 볼 때 정확히 평가

- 규모의 확대: 2017~2024년 대중국 희토류 수출 29만t·42억 달러 이상 추정, 약 85%의 2021년 이후 집중 카친주 가동 광산 2020년 약 130곳에서 2024년 말 370곳 이상으로 확대
- 정제 병목: 치퉁 지역 2,500개 이상 침출조 확인과 원료 생산 규모의 급속한 증대 2025년 1~9월 미얀마산 희토류의 중국 수입총액 약 53%, 양국 산업의 높은 상호연계성
- 투자 원칙: 한국의 선행 과제: 제:지질품위·회수율·물류·지역사회·정제 가능성의 통합 평가와 주변국 공동 해법



■ 책임 있는 중희토류 공급망의 3대 요건 (Responsible Heavy Rare-Earth Supply Chain)

● 지속가능한 협력은 국제규범 준수, 환경관리, 지역사회 포용을 비용이 아니라 시장 접근권으로 보는 데서 출발

- 국제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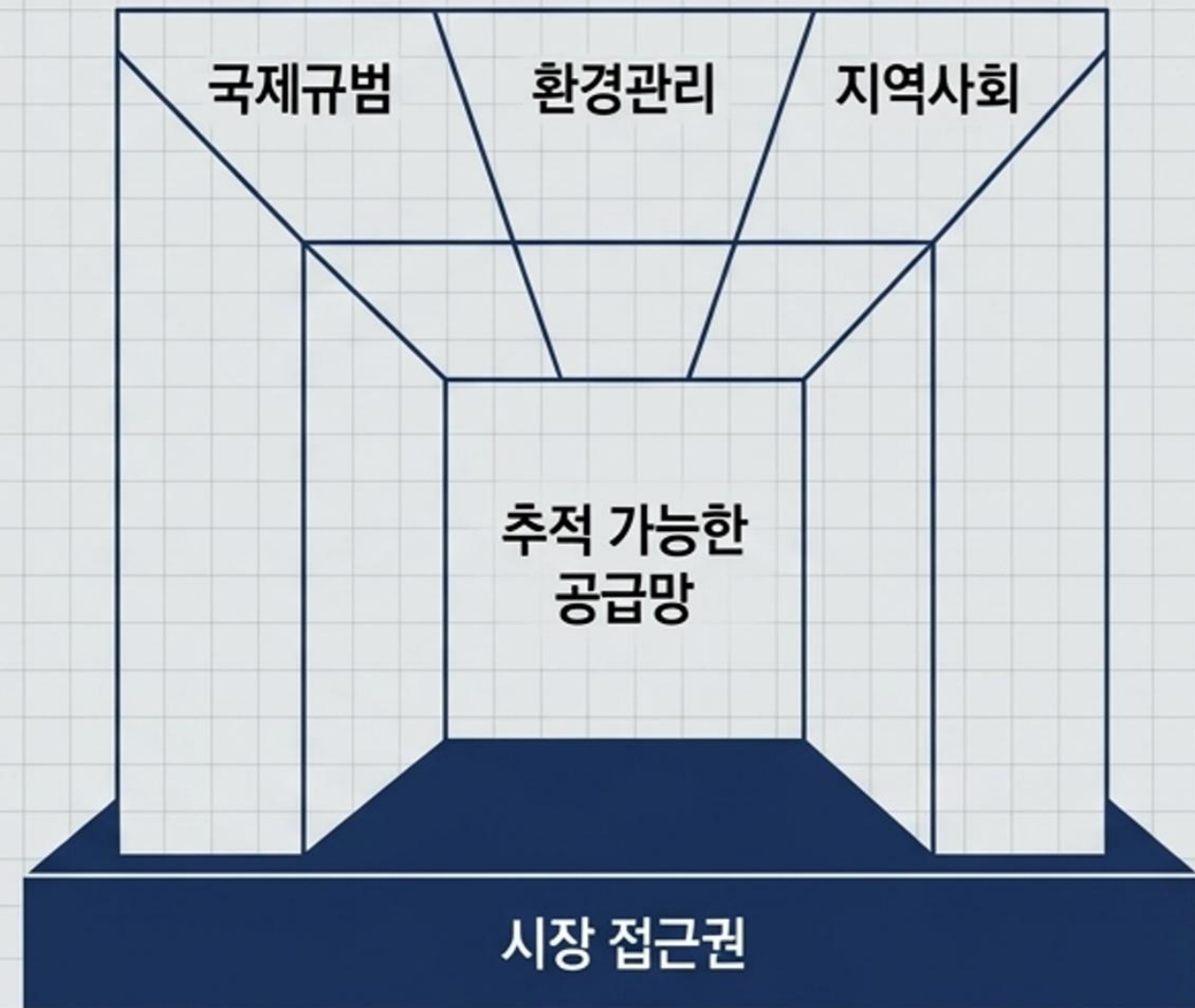
규범: 거래 상대와 실소유 구조, 계약과 대금 흐름, 국제 거래규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기업 실사체계를 마련
환경: 수질·토양·퇴적물의 기준선을 공동 조사하고 원위치 침출의 화학물질 사용·폐수·복원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

- 환경·지역사회

지역사회: 안전한 작업환경, 공정한 이익 공유, 주민 참여, 지역 인프라 개선을 사업 설계의 초기 단계부터 포함
원산지 추적: 광산-농축-정제-자석의 이력을 디지털로 연결하고 동위원소비·미량원소 기반 산지 판별 기술을 고도화

- 공동 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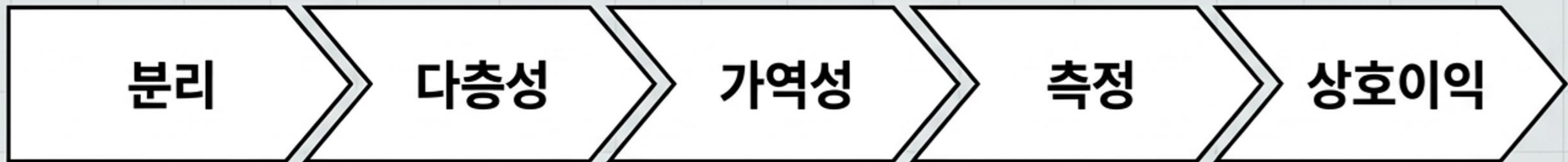
국제 연계: OECD 고위험지역 광물 실사 지침과 배터리·자석 관련 규범을 미얀마 현실에 맞게 적용하는 공동 표준을 개발



IV. 한국형 조건부 관여의 설계 : 고립-승인을 넘어

■ 거리두기와 전면협력 사이의 제3의 길 (A Third Way)

- 한국은 거리두기와 전면협력의 이분법을 넘어 민생·안전·기술·통상·제도를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실용적 접근을 설계 가능



- 정책 원칙: 첫째 원칙은 분리 / 외교적 판단, 실무적 대화, 기업의 상업거래를 서로 다른 정책수단으로 구분
둘째 원칙은 다층성 / 중앙정부·지역사회·국제기구·산업계·학계와 의제에 맞는 서로 다른 소통 통로를 운용
- 운용 방식: 셋째 원칙은 가역성 / 소규모·저위험 사업부터 시작하고 성과와 여건에 따라 속도와 범위를 조정
넷째 원칙은 측정 가능성 / 만남이나 투입액이 아니라 통관시간·지원 도달률·기업 애로 해소·환경성과를 평가
- 상호이익: 다섯째 원칙은 상호이익 / 미얀마의 민생·인재·산업 수요와 한국의 공급망·시장·국민안전을 함께 증진

■ 외교·실무·상업의 세 정책행위 분리 (Three Policy Instruments)

- 외교적 판단, 실무적 관여, 상업적 거래를 분리하면 원칙과 실리를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공간이 확대

	외교적 판단	실무적 관여	상업적 거래
성격	국가대표성과 공식 관계의 수준에 관한 법적·정치적 결정	구체적 의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	기업의 계약과 투자
주체	정부, 외교 당국	관련 부처, 기관, 학계, 전문가	기업, 민간 부문
의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	보건·재난·영사·기술·학술·국민안전 등	시장 접근, 공급망 확보, 이익 창출
안전장치	대화 자체를 특정한 외교적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음	사안별 확대 가능, 만남의 급·형식·의제·성과를 정교하게 설계	거래상대 확인, 국제규정 준수 환경·지역사회 실사를 전제로 추진 정부의 정보 제공 지원

- 정책수단 분리: 외교적 판단은 국가대표성과 공식 관계의 수준에 관한 법적·정치적 결정으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
실무적 관여는 보건·재난·영사·기술·학술·국민안전 등 구체적 의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으로 사안별 확대 가능
- 관여의 설계: 상업적 거래는 기업의 계약과 투자이며 거래상대 확인, 국제규정 준수, 환경·지역사회 실사를 전제로 추진
대화 자체를 특정한 외교적 판단과 동일시하지 않고, 만남의 급·형식·의제·성과를 정교하게 설계 필요
- 정부의 역할: 정부는 기업이 단독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규정 변화, 거래상대 정보, 지역별 안전·물류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자 역할을 담당

■ 2021년 정책의 2026년형 재점검 (Policy Recalibration)

● 정책 재점검은 기존 원칙의 포기가 아니라 변화한 여건 속에서 목적과 수단의 정합성을 높이는 과정

- 2021년 출발점: 2021년 3월
한국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군용물자, 전략물자 심사, 군용물자, 전략물자 심사, 개발협력에 관한 대응조치를 발표
동시에 민생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협력은 계속 추진
예외를 두어 실무적 공간을 유지
- 2026년 변화: 5년 사이 새 연방정부가 출범했고 중국·인도·태국·아세안의 접근도 교역·안전·민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다변화
각 조치가 한국 국민 보호, 기업 안정, 미얀마 민생, 역내 협력이라는 당초 목적에 실제로 기여했는지 분야별로 평가 필요
- 재점검 과제: 유지할 원칙, 조정할 절차, 확대할 민생협력을 구분한
'2026 한·미얀마 정책 재점검 보고서'를 마련할 필요

유지

조정

확대

보건, 농업, 재난,
영사, 학술, 직업교육

■ 여러 층위의 미얀마와 대화 (Multi-Level Engag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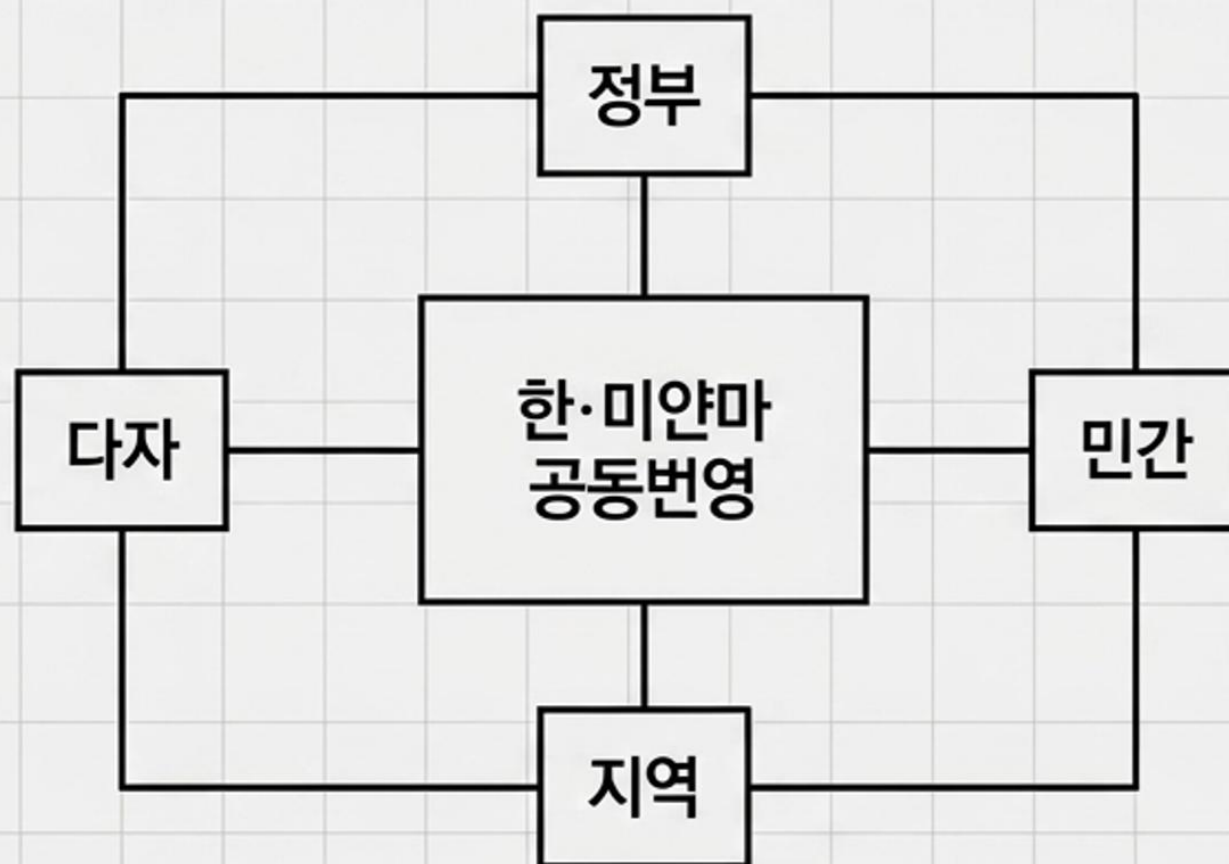
● 지역별 여건이 다양한 미얀마에서는 중앙정부·지역사회·다자기구·민간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층 관여체계가 필요

- 네 개 채널: 정부 채널: 통관, 투자제도, 기업 안전, 영사, 국가 간 경제협력과 같은 공식 의제를 협의
- 지역 채널: 자원지대와 국경지역의 생활경제, 환경, 물류,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

- 격의 차등화:

다자 채널: 아세안, 유엔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 등과
재난·보건·교육·인도적 협력을 추진

민간 채널: 대학·연구기관·경제단체·산업협회가
정보·기술·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래 정부 간 의제를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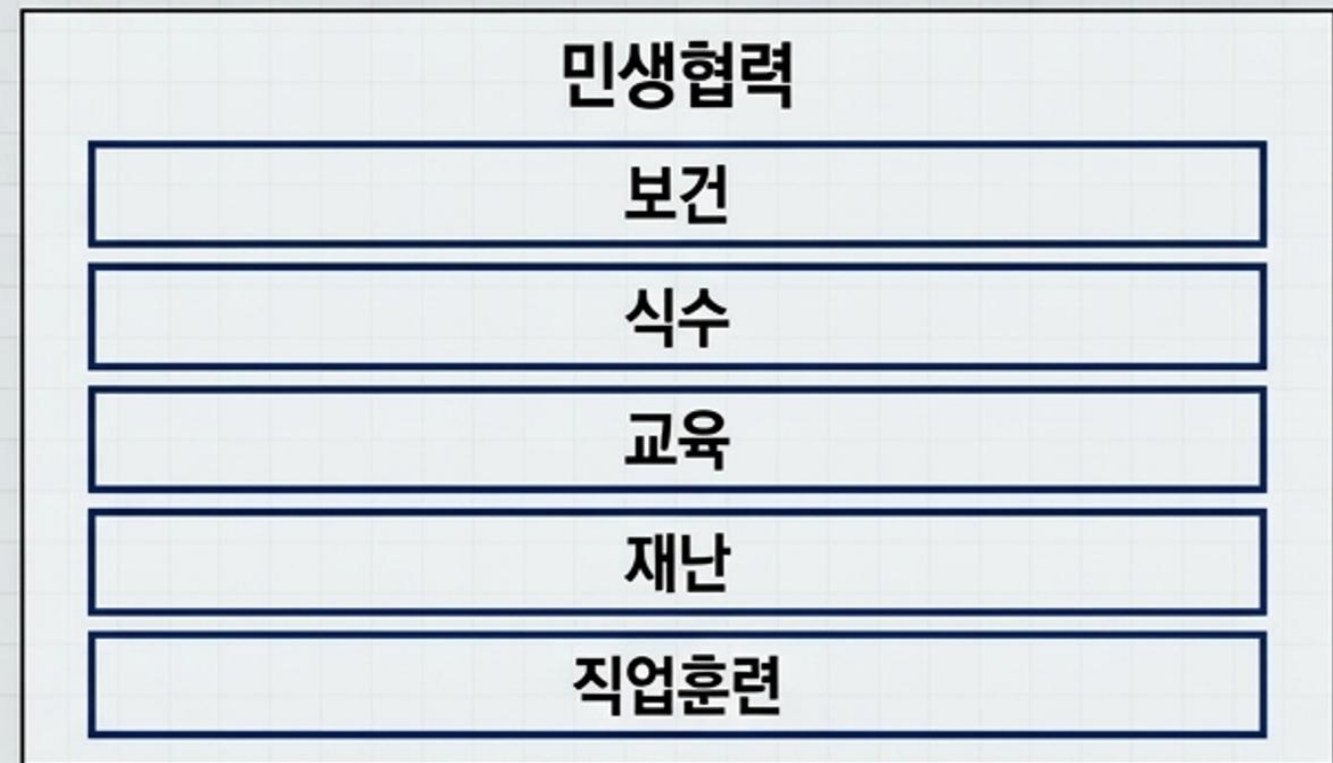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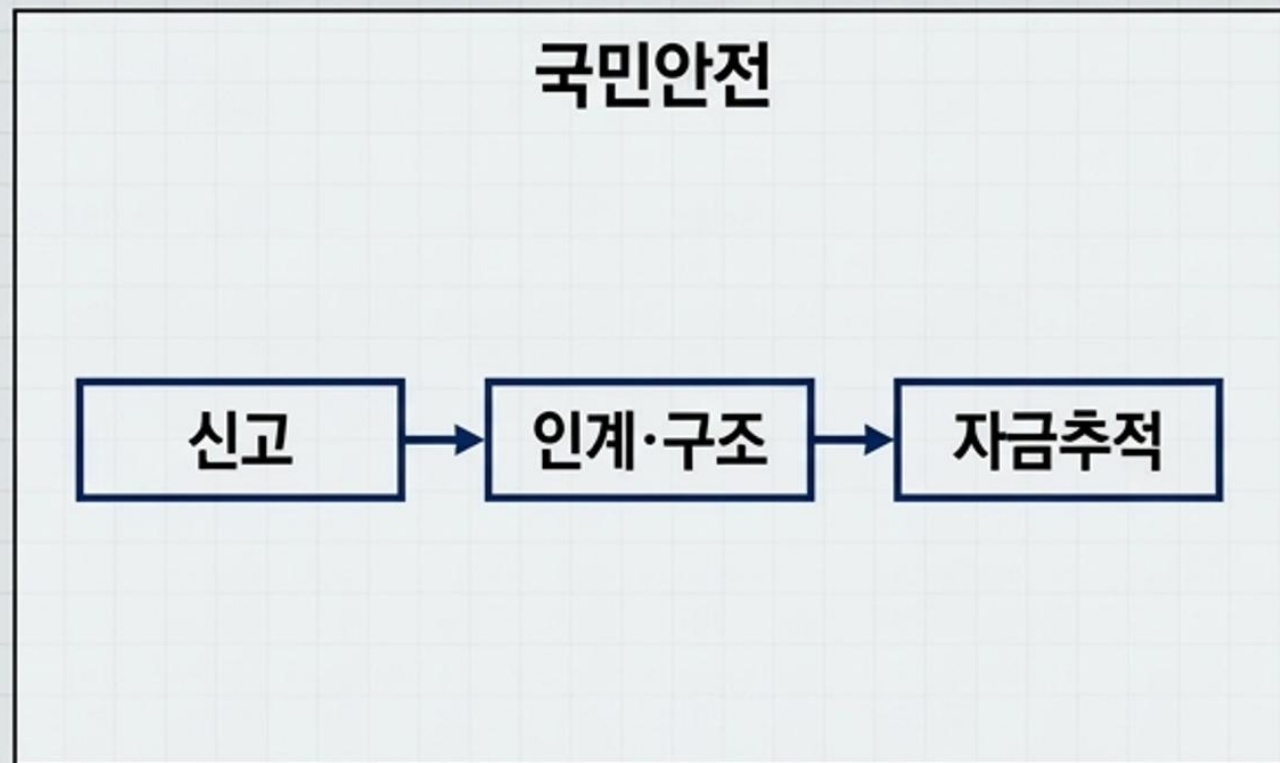


- 공동 목표: 각 통로의 격과 의제를 달리하되, 모든 소통은 미얀마 국민의 삶과 한·미얀마 공동이익을 높인다는 동일한 목적을 지향

■ 경제협력을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으로 확장 (Human Security Cooperation)

● 초국경 범죄 대응과 인도적 협력은 한국 국민 보호와 미얀마 주민의 생활 안정을 함께 달성하는 실용적 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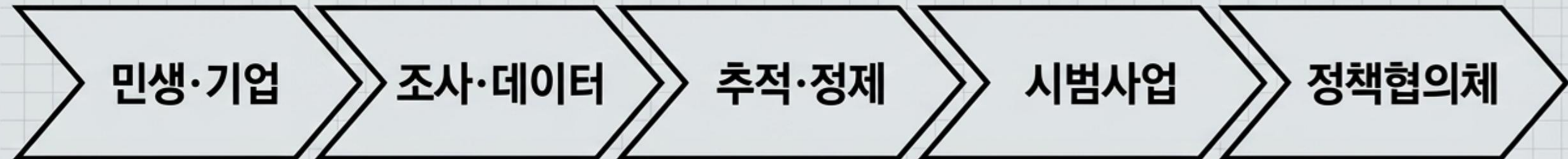
- 국민안전: 한국·미얀마·태국·아세아나폴 사이에 피해 신고, 실종 경로, 신원 확인, 국경 인계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
온라인 금융사기의 가상자산 흐름을 추적하고 허위 구인광고 차단, 피해 예방교육, 긴급 구조 연락체계를 연계
- 민생협력: 감염병 감시, 모자보건, 식수·위생, 학교 복구, 직업교육은 정치적 부담이 낮고 주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의제
지원은 유엔기구·국제적십자위원회·아세안 인도적지원조정센터와 협력해 지역별 도달 가능성을 제고
- 성과 측정: 성과는 투입액보다 도달 인구, 접근 지역, 통관 소요시간, 교육·보건서비스 회복률, 한국 국민 구조·예방 실적으로 측정



V. 안·미얀마 경제협력 로드맵: 문틈 열고 선택시 선점

■ 한·미얀마 경제협력의 단계별 로드맵 (Economic Cooperation Roadmap)

- 경제협력은 즉시 가능한 민생·기업 지원에서 시작해 조사·추적·정제 역량을 거쳐 상설 제도로 발전 필요, 양국 협력의 예측 가능성 강화



- 즉시·준비 단계:

- 즉시 단계: 보건·농업·재난복구·식수·교육·영사와 기존 진출기업 지원을 확대
- 준비 단계: 위성관측·무역통계·시료검증·환경기준선 등 자원정보를 공동 축적

- 역량·시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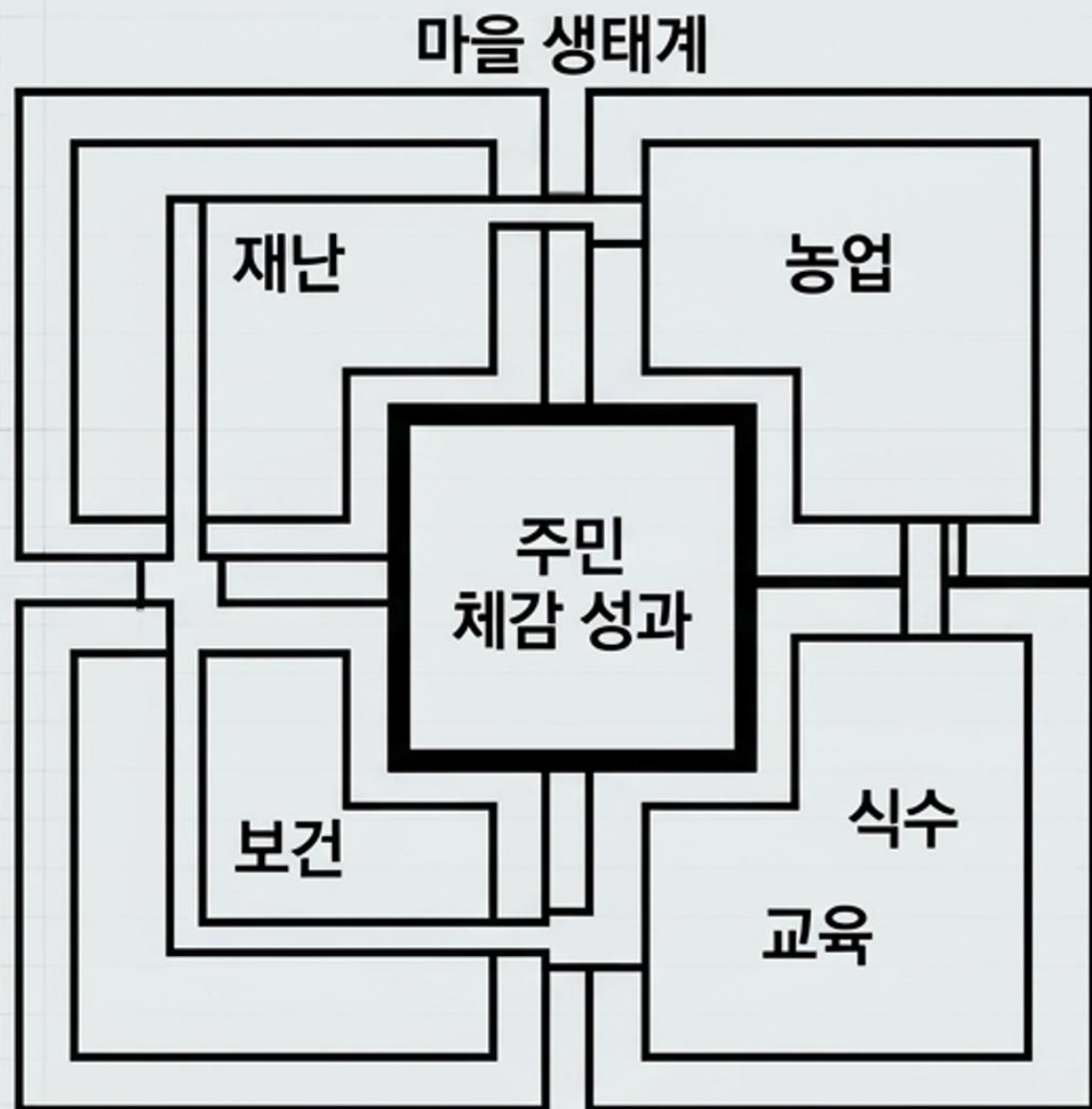
- 역량 단계: 원산지 추적, 제3국 분리·정제, 국내 자석 생산, 재자원화·저감기술을 연계
- 시범 단계: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이 확인된 품목·지역부터 소규모 공동사업과 시범거래를 추진

- 제도화:

- 제도 단계: 4단계 협력 사다리와 한·미얀마 경제안보 정책협약체를 통해 사업을 상시 점검
-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는 접근이 비용을 낮추고 미래의 협상지분을 제고

■ 즉시 착수할 민생·재난복구 패키지 (Immediate Livelihood Package)

- 첫 협력은 대규모 개발보다 주민이 체감하고 양국이 함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저위험 민생사업에서 착수 필요



- 재난·농업:
재난복구: 2025년 대지진 피해 조사, 내진 보강, 도시 인프라 복구, 재난 대응 교육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
농업: 우량종자·관개·저장·저온유통·농기계 정비를 연결해 농가 소득과 식량안정을 함께 제고
- 보건·생활기반:
보건: 감염병 감시, 모자보건, 이동진료, 의료인력 교육과 필수약품 물류를 연계
식수·위생: 소규모 정수시설, 수질검사, 위생시설을 지역 단위로 보급하고 유지관리 인력을 양성
- 성과관리:
교육·직업훈련: 한국 기업의 수요와 연계한 전기·기계·용접·농식품·디지털 교육을 확대
성과관리: 투입예산보다 수혜인구·서비스 회복률·현지 고용·기술이전·시설 유지율을 핵심지표로 설정

■ 기존 진출기업과 교민 기반의 보호 (Protecting Existing Stakes)

- 신규 투자 유치에 앞서 이미 형성된 기업·교민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양국 경제관계의 연속성을 지키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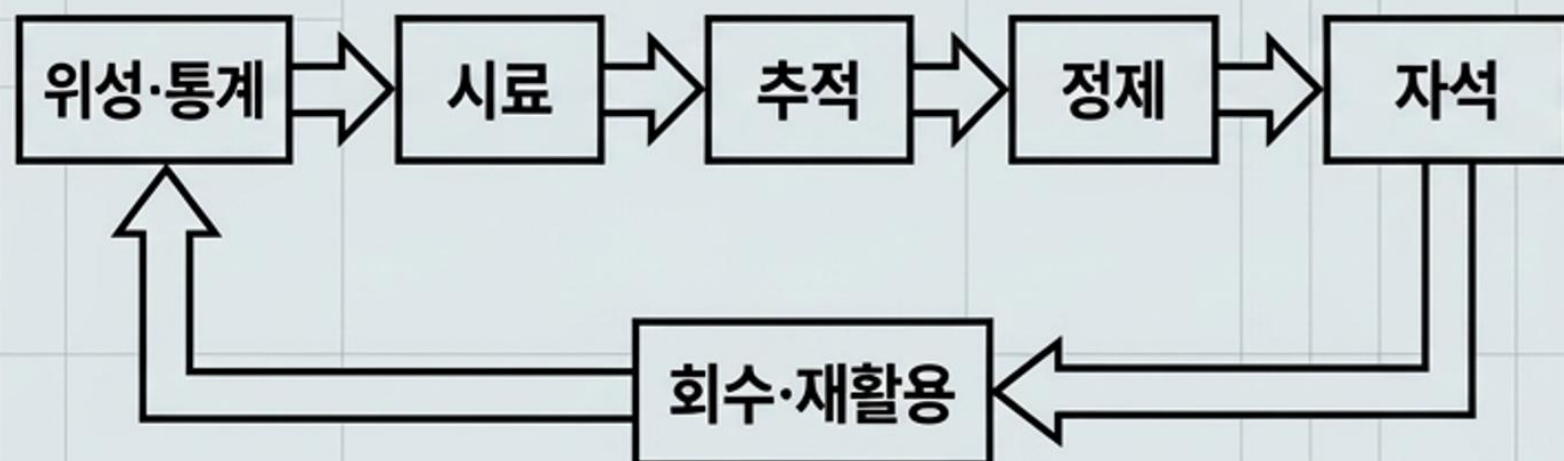
- 기존 경제기반: 한국의 대미얀마 누적 투자는 79억 달러, 1,379건이며 2025년 교역액은 8.9억 달러(수출 3.1억·수입 5.8억 달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A-1·A-3 해상광구 지분 51%를 보유하고 9,263억 원 규모의 4단계 개발을 진행

- 가스전의 의미: 2027년 7월 첫 가스 생산이 예상되며, 이 사업은 상업자산이자 미얀마 전력공급에 기여하는 민생 인프라
정부는 인력 안전, 자재 통관, 결제 경로, 거래상대 확인, 국제규정 준수를 지원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창구를 마련 필요

- 지원체계: 공관의 영사인력·비상연락망을 보강하고 기업-교민-공관의 분기별 비상대응 훈련과 지역별 연락체계를 정례화 필요

■ 채굴보다 조사·추적·정제 역량 우선 (Capabilities Before Extraction)

● 되돌리기 어려운 투자보다 정세가 변해도 가치가 남는 데이터·추적·정제 역량을 먼저 확보 필요



- 조사·검증

조사: 위성영상으로 광산·도로·침출조·환경 변화를 관찰하고
중국 해관통계를 품목·세관·월별로 분석

검증: 투명한 절차로 시료를 확보해 국내 연구기관에서
품위·회수율·불순물을 분석하고 미얀마 기관과 결과를 공유

- 추적·정제

추적: 동위원소비·미량원소 조성을 활용한 산지 판별과
광산-농축-정제-자석의 디지털 이력체계를 시범 구축

정제: 호주·인도·일본 등과 제3국 분리·정제 협력사업을
개발하고 한국 내 분리·합금·자석 설비 투자를 확대

- 순환·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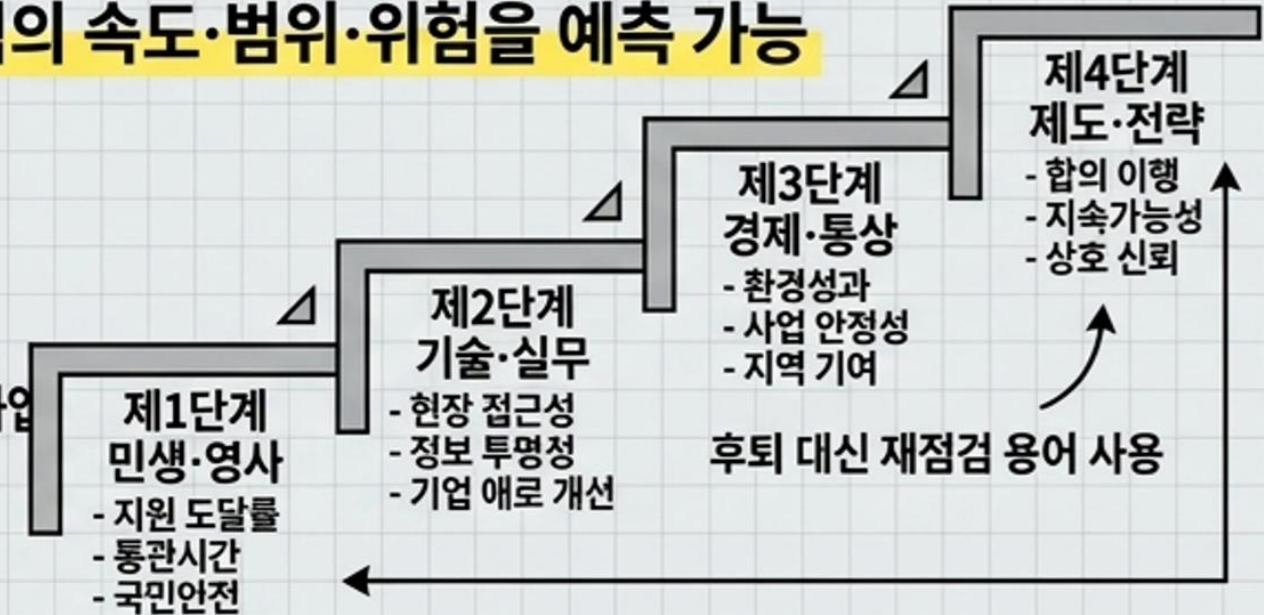
순환: 폐자석·폐모터에서 디스프로슘·테르븀을 회수하고
중희토류 사용을 줄이는 소재·모터 기술을 공동 연구

플랫폼: '한·미얀마 핵심광물 정보센터'를 설치해
지질·환경·물류·규정·시장 데이터를 축적

■ 예측 가능한 4단계 협력 사다리 (Four-Step Engagement Ladder)

● 단계와 성과지표가 명확할수록 양국 정부와 기업은 협력의 속도·범위·위험을 예측 가능

- 단계별 협력: 제1단계 민생·영사: 보건·재난·국민보호·연구기관 대화 / 지표는 지원 도달률, 통관시간, 국민안전
- 객관적 지표: 제3단계 경제·통상: 개발협력 확대, 무역·투자 실무협약, 투명한 시범거래 / 지표는 환경성과, 사업 안정성, 지역 기여
제4단계 제도·전략: 정부 간 자원협력, 상설 정책협의, 대형 공동사업 / 지표는 합의 이행, 지속가능성, 상호 신뢰
- 가역성: 각 단계는 자동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공동 평가를 통해 확대·유지·재점검을 결정하는 가역적 구조로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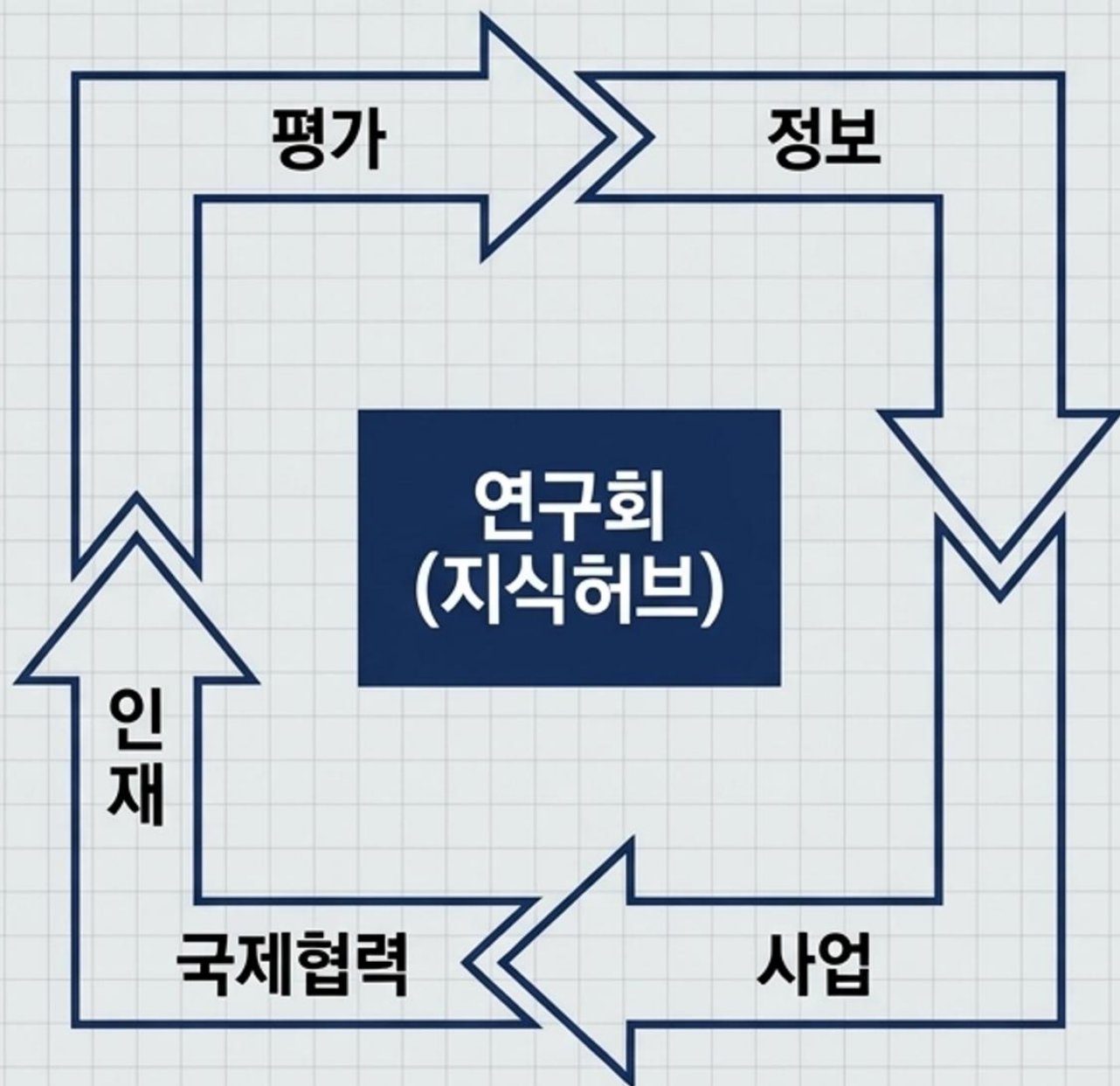
<표 2> 4단계 관여 사다리와 단계별 전진·후퇴 조건

단계	단계	주요 내용	전진 조건	후퇴 조건	검증 지표
제1단계	인도·영사	인도적 지원, 재난복구, 국민 보호 협력, 연구기관 간 대화	조건 없이 즉시 착수하며 상시 유지	적용하지 않음	도달 인구, 접근 구역 분포, 통관 소요 일수
제2단계	기술·실무	지질·환경 조사 협력, 원산지 추적 기술 협의, 초국경 범죄 수사 공조, 진출기업 지원	인도적 접근의 실질적 확대, 한국 국민에 대한 신변 위해 감소	국민 억류·피해의 재증가, 인도적 접근의 차단	억류 국민 수, 구출 인원, 지원 물자 전용 사례
제3단계	경제·통상	개발협력 부분 재개, 무역·투자 실무협약 재가동, 제3국 정제 연계 원료 시범 거래	정치범 문제의 실질적 진전, 민간인 대상 무력 사용의 검증 가능한 감축, 광물 거래 자금 흐름의 최소 투명성	정치범 재수감, 공습·민간인 사상자의 재증가	석방 인원과 재수감 여부, 공습 횟수, 학교·병원 피격 건수
제4단계	제도·정치	대사급 외교관계 정상화, 개발협력 전면 재개, 정부 간 자원협력 협정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치 대화 개시, 검증 가능한 휴전	대화 중단, 휴전 붕괴, 신규 대규모 공세	합의 문서의 존재, 참여 주체의 범위, 휴전 위반 건수

송승종(2026), 제4장 제3절 <표 2>를 창립총회용 재구성.

■ 한·미얀마 경제안보 정책협의체 (Economic Security Policy Council)

- 경제협력을 일회성 행사에서 상시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정부·학계·산업계가 함께 움직이는 협의체가 필요



- 평가·정보

- 정세·시장 평가: 분기별로 정치·경제·산업·지역 동향을 갱신하고 4단계 협력 사다리의 현재 위치를 점검
- 기업 정보지원: 국제규정, 거래상대, 실소유 구조, 지역별 안전, 통관·결제 변화를 기업에 적시에 제공

- 사업·국제조율

- 공동 의제 발굴: 핵심광물·가스·전력·농업·보건·디지털·재난·인재양성 분야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 국제 조율: 아세안·중국·인도·일본·호주·국제기구와 중복을 줄이고 상호보완적 사업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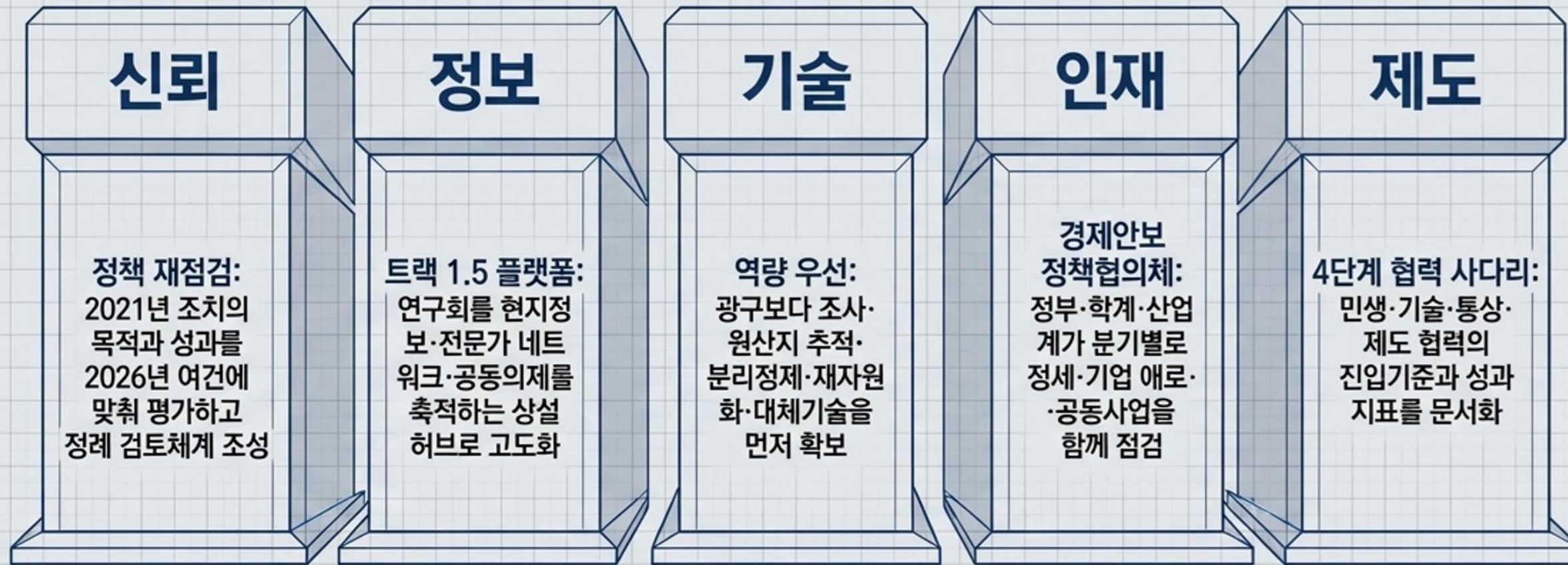
- 연구회 역할

- 인재 네트워크: 양국 청년 연구자·기술자·기업인을 위한 펠로십, 공동연구, 인턴십, 직업교육을 운영
- 연구회 역할: 초기 사무국과 지식허브를 맡아 현지 정보·인맥·사업 목록을 축적하고 정부에 정책대안을 제공

VI. 정책 제언

■ 5대 정책 제언 (Five Policy Proposals)

- 지금 선점해야 할 것은 광산이 아니라 신뢰·정보·기술·인재·제도라는 다섯 가지 장기자산



- 정책·사다리: 제언 1 | 정책 재점검: 2021년 조치의 목적과 성과를 2026년 여건에 맞춰 분야별로 평가하고 정례 검토체계를 조성
제언 2 | 4단계 협력 사다리: 민생·기술·통상·제도 협력의 진입기준과 성과지표를 문서화
- 역량·플랫폼: 제언 3 | 역량 우선: 광구보다 조사·원산지 추적·분리정제·재자원화·대체기술을 먼저 확보
제언 4 | 트랙 1.5 플랫폼: 연구를 현지정보·전문가 네트워크·공동의제를 축적하는 상설 허브로 고도화
- 정책협의체: 제언 5 | 경제안보 정책협의체: 정부·학계·산업계가 분기별로 정세·기업 애로·공동사업을 함께 점검

■ 공동번영을 향한 한국의 선택 (Korea's Choice for Shared Prosperity)

● 한·미얀마 협력은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않고, 원칙을 지키되 실질 성과를 만들며, 자원을 넘어 사람과 미래를 연결 필요

- 연결국가: 미얀마는 인도양과 아세안, 중국과 인도를 잇는 연결국가이자 한국 미래산업의 잠재적 경제안보 파트너
한국은 전기차·로봇·에너지·디지털·보건·농업·재난대응 분야의 경험을 미얀마의 발전 수요와 결합 가능
- 상호보완성: 협력은 민생과 국민안전에서 시작해 조사·기술·인재로 넓히고, 성과와 신뢰가 축적될 때 통상과 제도로 발전 필요
미얀마는 새로운 성장 기회와 산업역량을, 한국은 공급망 회복력과 시장·외교의 선택지를 얻는 상생 구조를 지향 필요
- 공동번영: 오늘 연구회의 창립은 양국 사이의 모든 문을 한꺼번에 여는 행사가 아니라 오래 지속될 협력의 문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



